지자체 주도 성지화 부작용…역사·불교 퇴색

도 넘는 가톨릭 성지화에 우려 확산

가톨릭 성지 잇는 순례길 사업
경기도 광주 비롯해 전국 확산
지역역사 · 불교문화 퇴색 심각
"과도한 성지화, 갈등요인"지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가톨릭 성지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가톨릭 교구가 조성한 성지들을 중심으로 순교기념관이나 역사공원 조성 등을 넘어, 최근 성지와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 개발까지 '지역 성지화'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지화가 지역문화 · 관광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내재된 기존 역사와 종교문화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 덮어씌우기'라는 우려가 높다.

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가톨릭 순교지와 발상지를 잇는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 중 순교성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가톨릭 발상지는 천진암터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두 성지를 잇는 32km의 순례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은 '역사문화관광벨트'이지만, 사실상 가톨릭 성지 두 곳을 잇는 순례길이라는 점에서 남한산성에 담긴 역사와 불교암자로서 천진암의 정체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천진암터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과거 사찰이 자리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스님들이 박해를 피해 찾아온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했던 암자로, 가톨릭 신자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피해 강학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천진암이 한국 가톨릭의 발상지로 불리게 된 근간에 천진암 스님들의 자비가 스며있는 셈이다. 나라의 명을 거역한 채 가톨릭 신자들을 숨겨준 대가로 천진암은 불타고 스님들이 희생됐지만, 가톨릭 성지가 된 천진암에 이 같은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에 지자체가 나서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소문역사공원이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지난 2014년 건립 당시부터 특정 종교가 국유지를 점유해 성지화 사업에 나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94%에 달하는 1만7000㎡가 국유지이고 가톨릭 소유지는 전무한 상황에서, 가톨릭 박해 역사공원과 순교자 추모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3월 24일 천주교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사진 오른쪽)를 만나 '남한산성~천진암 순례길'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특히 서소문터는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지이기에 앞서, 조선시대 국가적인 통치행위가 이뤄진 역사적 공간이자 동학농민운동 당시 처형된 수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반발이 컸다. 역사적 사실보다 순교 성지로서의 의미를 필요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치우쳐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숱한 논란 끝에 2019년 문을 연 서소문역사공원은 현재 '서소문성지'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순례길 조성도 진행 중이다.

서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해미천주교순례길도 비슷한 사례다. 순례길 조성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기점으로 추진됐으며, 애초 일부 코스에 전통사찰 천장사도 포함돼 있었지만 조성과정에서 천장사로 향하던 10km 길이 사라져 불교계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불교계는 "해미읍성은 동서남북에 미륵불을 세워 나라를 보호했던 불교성지이기도 하다"며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종교 덮어씌우기'는 종교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서산시 순례길은 '해미천주교순례길'로 불리며 정비를 마쳤고, 해미읍성은 최근 '해미순교성지'라는 명칭으로 가톨릭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최근 들어 기존 조성된 가톨릭 성지들을 잇는 순례길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당진시는 최근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뫼성지와 충남지역 첫 본당인 합덕성당 등 당진시에 산재한 성지와 명소를 잇는 '버그내순례길' 조성에 나섰으며 용인시는 도비 1억원을 투입해 김대건 신부와 은이성지와 미리내성지를 잇는 '청년 김대건 순례길'을 조성 중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안성 · 당진시와 '천주교 문화광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천주교 역사체험관 및 순례길'을 조성 중이다. 특히 제주도 순례길은 김대건 신부의 길, 하논성당길, 정난주마리아의 길 등 제주지역 내 성당과 성지를 잇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6곳에 달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기존 조성된 가톨릭 성지들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관광 · 문화 활성화를 명분삼아 다른 전통유적과 사적들을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 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2019년 비공개로 발간한 '종교계 성지화 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법' 보고서에 따르면 성지로 인한 갈등 요인은 △같은 공간 내 서로 다른 종교적 기억의 갈등 △같은 공간 내 종교적 기억과 역사적 기억의 갈등 △특정공간에 깃든 종교적 기억의 무시와 삭제 △성지의 선점과 기억의 약탈 · 복원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완공됐거나 추진 중인 성지화 사업들이 지역 내 역사유적과 전통종교를 배제한 채 특정 종교만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종교갈등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역사가 길지 않는 가톨릭 특성상 성지의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순교지나 선교장소, 성당 등 신앙적 공간이기에, 종교를 넘어서 역사 ·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앞장서서 기념관 건립과 순례길 조성 등 성지화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을 배제하거나 지역 고유의 역사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 추모 · 국내 유학생 지원 봇물

4월 4일 구미서 추모법회
자비명상, 유학생과 결연
국제 사회에 대응 촉구도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군부에 의한 폭력적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국내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민주화지지를 위한 모금활동은 물론, 한국 내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비명상 · 현성정사(대표 마가)는 4월 8일 한국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결연식을 진행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여파로 본국과 통신이 단절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주최측은 "사단법인 자비명상 소속 300여 사찰이 미얀마 유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돕고자 뜻을 모았다"며 "재한미얀마유학생과 결연을 맺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멘토 역할로 자처했다. 결연을 계기로 미얀마유학생들에게는 사찰 스님들과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일상의 삶으로 찾아가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홍법사가 봉행한 '미얀마 평화기원 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도 4월 7일 개최된 교구종회에 앞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진성 스님, 교구종회의장 법전 스님을 비롯한 교구종회의원 스님들은 △군부 쿠데타를 반대한다. △구금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 △미얀마 국민의 뜻대로 해주세요를 외치며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적 자유 의사를 지지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사)나누우리와 함께 세손가락 경례뱃지를 구입해 불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모금되는 성금은 미얀마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3일 대광명전에서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은 4월 1일부터 진행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개인의 안녕과 평화보다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시간으로 특별회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회향식에서 불자들은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는 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연꽃등을 밝히고 미얀마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4월 4일 구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승가결사체 마하보현승가회(회장 덕신), 미얀마 대구 찟따수타 사원(대표 위쑤따)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추모법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민간인 학살 쿠데타를 반대하는 마음을 모으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종교시민사회단체들도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을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와 지리산종교연대, 우리신학연구소, 3.1종교개혁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은 4월 2일 긴급 서명 제안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희 · 하성미 기자 · 조동제 지사장

4.3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재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 4월 3일
4월 23~25일 제주서 천도재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재가 봉행됐다.〈사진〉 추모재는 지난 2월 제주4.3 피해자들의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4월 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공원에서 '제주 4.3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4.3사건은 불교계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관음사를 비롯해 40여 개 사찰이 소실됐고 스님 1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21년만에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한층 더 명확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게 됐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3만여 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8만여 유가족들이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길 기도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제주 4.3사건이 과거의 뼈아픈 고통이 아닌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서관음사지와 용장사지, 원천사지, 극락사지, 귀이사지 등 4.3사건 당시 피해 현장을 순례하며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쌍계사는 성덕왕23년(724)삼법과 대비 화상 개산. 문성왕2년(840)진감혜소선사 창건

쌍계사 보살계 안내

● **일시** : 음 3월 5~7일까지 3일간 ＊**입재** : **5일 오후 2시** ＊**회향** : **7일 새벽 4시**
＊**선다회총회** : **5일 저녁 7시** ＊**대장경정대불사** : **7일 오전 8시**
● **장소** : 금강계단(팔영루=진감선사께서 불교음악인 범패 어산을 창제하신 곳)
● **문의** : 종무소 **Tel. 055-883-1901**



한국불교는 쌍계사에서 시작된 해동계맥과 청나라에서 전래된 중국계맥등 양대계맥이 존재하는데
이 양대 계맥이 모두 동산율사 석암율사 고산율사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쌍계사는 계율의 근본도량이요 율찰대본산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계율의 근본도량에서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모든 분들은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계율은 부처님께서 모든 생활규범을 제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부처님과의 맹세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도덕입니다.

※ 쌍계사는 해인사 다음으로 많은 경판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대장경정대불사
(육조단경인경본)도 함께 봉행합니다.

※ 선원제전집도서 보물2111호 22판.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보물 제2112호 11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보물 제2113호 335판.
그 외 지방유형문화재 185호 1376판.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禪)·교(敎)·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三神山雙磎寺